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금출처·사용내역 수사요청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6/22)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전단의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분탕질을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감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지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재 도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감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전단 살포 금지법' 요구



◀ 영커 ▶

그런가 하면 남측이 한 달목인 단제가 이번주 특요일, 대북 전단을 날려줬다고 거침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도 관련 수사와 경기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침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파주의 한 공원.

파주시 이항단과 상연 연합회, 민통선 통일촌 주민회 등 13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들은 일부 단체들이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기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전단 살포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파주 해미루촌 주민]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 주민들 눈앞에서 일도 못하게 할 지경이 될 거 같아요. '재발 전단 뿌리지 말고 조용히 좀 있으시라'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과거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경기도 파주의 통일전망대 앞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찰이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대비해 주차장 일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 탈북자 단체가 8.25.70주년인 오는 25일 전후로 '바람만 맞으면 대북전단 100만장을 날려줬다'고 밝히면서

경찰이 파주와 연천 등 주요 접경지역의 경비를 강화한 겁니다.

광고 ##이와 동시에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대북 단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40여명 규모의 대북전단 수사팀을 구성했고, 박상희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근셀 대표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에서 탈북 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소 가스통 20개를 찾아내 압수하고, 어떤 단체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기도지사 역시 "관련 단체들에 자금 출처와 용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경기도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살포 불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하, 김재현 / 영상편집: 이희영)(조희형)

"6·25 전후 대북전단 살포할 것"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한 탈북민단체가 한국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을 전후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감한 이때, 괜히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헬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모습입니다.

북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언했지만 아직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우리 측 접경지역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단체 '큰샘'은 강화군 석모도에서 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지만, 인천시청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행사를 진격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대한민국 경찰 다 가 있으라 해요. 감쪽같이 대한민국은 밤에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보라고, 어떻게 되나.]

접경지역 주민은 북한을 다시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월곶면 주민 : 어쨌든 불안하죠. 서울 뒤편 바다로 만들어놓는다,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 극우 성향 인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봉쇄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침에 반발해 지난주 페이스북에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지사 자택과 경기도청 부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탈북단체시설 철거...단체 "반발"



【앵커】

경기도가 지난 주 포천의 한 탈북단체 시설이 불법이라며 철거 방침을 밝히자, 해당 탈북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대북전단 실포를 중단했는데 갑작스럽게 불법 얘기하는 것은 무당하다는 건데요.

유은총 기자가 논란이 된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한 탈북단체 시설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곳에서 8년간 대북전단을 만들어 묵으로 날려보낸 장소입니다.

경기도는 이 시설이 불법이라며 철거 방침을 밝히고, 포천시에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주 이 시설 내에 가스 주입 시설을 사용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무허가로 무단으로 이 분이 집을 지어 사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 집 안에다가 대북전단을 보관하고 계세요.]

【스탠딩】

경기도에서 이런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까지는 두 차례 시정명령과 한번의 대집행 계고가 진행되는데, 적어도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은 더 걸리게 됩니다.

이민북 대표는 불법시설 철거는 받아 들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라며 대북전단을 만들어 살포했고, 그마저도 4.27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멈췄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는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이민북 / 북한동포적점점기운동 대북공동선단 대표: '범법자하고 모범시민하고 똑같이 본다' 그게 말이 돼요? 세상에 다 나쁘다고 하면 여기가 북한이예요? 뭐예요?]

그러나 가스 사용금지를 놓고서는 이 씨 자신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이현정>

탈북민단체 협박 유아무야..."공권력저항 엄정 대응"



【앵커】

대북전단 살포에 담긴 방침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택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발하겠다고 운운한 탈북민단체의 협박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지사는 탈북민단체가 공권력에 저항하면 범죄단체로 보고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청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한 보수성향 단체 회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막으면 가스통을 폭발하겠다"는 협박에 따른 조치입니다.

【스탠딩】

경찰 경비는 주말 내내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폭발 위험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경비는 현재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지사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며 경찰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탈북민단체가 공권력에 저항해 안전을 위협하면 범죄단체로 간주해 책임을 물겠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미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북측의 도발을 유도해서 충격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정말 백해무익한 사적이익을 위한 국가안보 교란행위...]

SNS에서는 설전이 오갔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북한에는 쪽소리도 못한다"고 비난하자, 이 지사는 "대중 선동하는 쪽소리"는 하 의원의 전매 특허라며 맞섰습니다.

탈북민단체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집경지역 긴장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청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종렬 / 영상편집: 이현정>

대북전단 살포 위협에 이재명 지사 자택·공관 등 경비 강화

대북 전단 살포를 봉쇄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반발한 한 보수 성향의 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 근처에서 전단을 뿌리고 이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해 경침이 비상경계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전단 살포와 폭파 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헌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엄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금출처·사용내역 수사요청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협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책임질 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도청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전단의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 북한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시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문답질을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현재 도 차원미 대응에 대해서는 "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문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탈북단체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접경지 주민 '불안'

[앵커]

북한에 쌀 페트병을 보내려던 한 탈북민단체가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정부가 강력 대응방향을 밝히자 밀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한 또 다른 단체는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접경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강화도로 들어가는 다리 앞, 경광등을 든 경찰들이 차량을 일일이 살펴본 뒤 들여보냅니다.

경찰관계자

"가스를 싣고 가야 되잖아요, (쌀을) 띄우려면, 물에다 하는 것도 있고 풍선도 있고..."

석모도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검문소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탈북민들이 쌀 페트병을 보내던 해안가입니다. 옆에선 경찰들이 이렇게 임구부터 막고 있습니다.

북한에 쌀을 보냈던 한 탈북민단체는 결국 밀정을 취소했습니다.

대북전단을 주로 살포하는 파주 접경지역 곳곳에도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과 경찰이 보입니다.

오는 25일 대북 전단지 100만장 살포하겠다고 한 탈북민단체가 강행 의지를 밝히자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보복을 두렵다고 호소합니다.

최민기 / 석모3리 이장

"이북에서 우리 강화에다가 포라도 한번 쏘봐요, 피해가는건 누구야 주인이야. 저거(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그러는데..."

이완배 / 동일촌 이장

"(전단을) 날리면 북한에서 자꾸 반항이 오잖아요. 그 즉시 뭐 포를 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고 경찰은 이 지사의 자택과 도청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 story@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단체 자금 출처·사용 내역 수사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과 관련해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경기도의회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북한 인권이 주된 목적인 것 처럼 표명하지만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표현의 저열함이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이고 인권 개선에 도움은 커녕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전이나 국민 생명, 북 인권개선, 남북관계 개선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명백하다"며 "안전을 위협하면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통일부의 수사 의뢰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수사 중인 경찰도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데 쓰이는 가스등을 압수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수소 가스등 20개를 압수하고 대북 전단 등 살포 활동 관련자 2명을 입건했다"며 "중대한 사안이고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한 문제이니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보안부장을 TF팀장으로 하는 40여 명 규모의 TF팀을 꾸렸고 경기도 연천·파주·인천·감화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경기]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 요청 방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려는 커녕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분탕질을 통해 자유의 환경을 파괴하려는 것으로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체 '자금 출처' 등 수사 요청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경기도>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에 대해 수사 요청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인권이 아닌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표현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뿐"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자금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해 체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경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도가 가진 모든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관련 물품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수아 suatuv@ifm.kr

이재명, 대북전단 단체에 연일 집중 포화 "자금 수사 요청"

이 지사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밝히

[CBS노컷뉴스 윤철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향해 연일 집중 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공이익 저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서품 내역,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전단의 표면 내용이 저열하고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할 뿐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는 않음 오히려 남북관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히 폭력적 방법으로 자행해 피해에 위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강력한 조치로 그들이 어떤 자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어디서 조달하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도가 가진 모든 범형상 권한을 총동원해 안전시대를 실질적이고 (관련) 법률 탄압을 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리스크=연합뉴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은 위험에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이 수차례 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지난 주말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련자로 추정되는 한 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면서 경찰이 이 지사 지역과 도지사 관련, 경기도청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와 불법행위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게 엄중하게 책임 묻고 질서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돈도 벌려고 북한인권문등을 명치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불법행위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 즉시 엄박명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god@cbc.co.kr